

WSIS 파리중간회의의 쟁점과 향후전략

연구위원 정 찬 모*

2003. 12. 10~12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는 정보회의의 국제적 성과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역기능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정보화 사례를 세계적 차원에서 홍보하면서 한국정보회의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념을 세계 정상들이 채택하는 정보사회 원칙선언문 및 행동계획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준비회의의 주요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해 본다.

목 차

- | | |
|------------------|-----------------------------|
| I. 서 론 | 7. 지표, 지수 개발 및 기금 필요성 |
| II. 파리중간회의의 주요쟁점 | 8. 정보화에 있어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역할 |
| 1. 정보사회와 지식사회 | III. 향후 전략 |
| 2. 인 권 | 1. 기본입장 |
| 3. 인터넷 주소자원의 관리 | 2. 아국 정상 참석여부 |
| 4. 지적재산권 | 3. 아국 기업과 시민단체의 참여 |
| 5. 오픈 소스 S/W | IV. 결 론 |
| 6. 정보보안 | |

I. 서 론

1998년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전권회의에서 튀니지아는 정보사회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전권위원회 결의 73으로 ITU 사무총장에게 정보사회 정상회의를

연락처: * 미래한국연구실 (02) 570-4131, cmchung@kisdi.re.kr

※ 이 글의 작성에는 정보통신부 김인수 국제기구담당관을 비롯한 파리중간회의 한국대표단과 원내 김현주 연구원의 도움이 있었기에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이 글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저자의 몫이다.

기획할 것을 주문하였다.¹⁾ 이어 2001년 ITU 이사회는 UN의 이름 하에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 SIS,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를 2단계로 개최하되 제1차는 2003. 12. 10~12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차는 2005. 11. 16~18 튀니지의 튀니즈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01년 12월 UN 총회는 결의 56/183으로 이를 승인하였다. 동 유엔 총회 결의는 정상회의가 정보사회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비전을 개발하고 정부, 국제기구, 기타 시민사회의 각 부문이 함께 이행할 선언문 및 행동계획을 채택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어 2002년 마라케시 ITU 전권회의는 다음과 같은 3개의 아젠다를 제시하였다.

- 정보통신기술을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하도록
- 정보통신기술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역할
- 정보통신기술 이용에 있어 신뢰와 안전성 확보

그동안 WSIS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일련의 고위급전체준비회의(PrepCom)와 지역준비회의(Regional Conferences)로 준비되고 있다. 2002. 7. 1~5 제1차 준비회의, 2003. 2. 17~28 제2차 준비회의, 2003. 7. 15~18 중간회의(Intersessional Meeting, 파리)가 열렸으며, 2003. 9. 15~26 제3차 준비회의가 마지막 고위급전체준비회의로 예정되어 있다.

지역준비회의는 아프리카 지역준비회의(2002. 5 말리 바마코), 범유럽 지역준비회의(2002. 11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아시아태평양 지역준비회의(2003. 1 일본 동경),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준비회의(2001. 1 도미니카 산토도밍고), 서아시아 지역준비회의(2003. 2 레바논 베이루트)가 개최되었다.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조직을 살펴보면 ITU, UNDP, UNESCO, WIPO 등 대부분의 유엔 전문기구 사무총장이 참여하는 고위급 정상회의준비위원회(High-Level Summit Organizing Committee)가 있고, 제네바 ITU 본부에 사무국(Executive Secretariat)이 설치되어 있다.

2003. 12. 10~12 제네바에서 열릴 WSIS 본회의의 구성은 (i) 정부간 회의, (ii) 병행행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부간 회의는 다음과 같이 기획되고 있다:

- 가. 선언문과 행동계획을 채택할 정상 전체회의
- 나.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1) WSIS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위해서는 ITU의 WSIS 공식 홈페이지인 www.itu.int/wsis/ 및 주최국인 스위스의 공식 홈페이지인 www.wsisgeneva2003.org를 참고할 것.

다. 초안 기초위원회 등 기타 관련 실무회의

병행 행사는 WSIS에 참가하는 기구,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주관하여 개최하는 행사이다. 2003. 6. 30일까지 신청된 행사를 일별해보면, 정부 제안으로는 그리스가 제안한 'ICT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회의', 일본이 제안한 '유비쿼터스 워크샵', 역시 일본이 제안한 '이동통신 콘텐츠 시상식' 등이 있다.

유엔 전문가들도 자신의 관할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화 사업 및 그 정치·경제·사회적 영향에 관한 심포지움을 제안해 놓고 있다. 기업과 시민사회도 각각 자신의 관심분야를 홍보할 수 있는 다수의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II. 파리중간회의의 주요쟁점

WSIS의 특징 중 하나는 논의 주제의 포괄성이다.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하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도 다양하다. 일부만 언급해보자면, 정보통신인프라, 상호운용성, 보편적 접근, 미디어, 전파자원관리, 인적자원 개발, 여성·장애인·농촌 등 계층간 지역간 정보격차,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 정보보안, 프라이버시 보호, 불건전 정보, 표현의 자유, 스팸, 소비자 보호, 정보윤리, 기술표준, 기술이전, 공개소프트웨어,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e-learning 등 각종 응용서비스, 전자민주주의, 정보사회의 좋은 정부(good governance),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 인터넷 관리구조, 정보화 국가전략 등이다.²⁾ 이하에서는 특히 파리중간회의에서 쟁점이 된 분야에 한정해서 고찰한다.

1. 정보사회와 지식사회

이란, UNESCO 등은 정보사회를 지식사회로 이전하는 중간단계로 보는 견해를 표명하면서 2003년 정보사회, 2005년 지식사회 건설을 정상회의의 목표로 제안하였다. 이에 정보사회와 지식사회의 개념정의를 문제로 대두하였으며 그 함의에 대한 각국의 이해가 달라서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생각하건대 정보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이란 수단적 측면과 다량의 정보의 빠른 유통이란 현상적 측면을 묘사하고 있다면 지식사회는 그로인해 사회의 지식수준이 증가해야한다는 궁극

2) 구체적 논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포럼"(2003. 5. 23~24) 자료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서보현 외, "WSIS의 주요 이슈와 전망", KISDI 이슈리포트, 2003. 8. 4를 참고.

적 목표를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정보와 지식은 서로 시간적으로 공존하며 보완 관계에 있는 개념이다. 나아가 광의의 정보사회는 지식사회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WSIS에서 논하는 정보사회는 이러한 광의의 정보사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다. 지식사회가 정보사회의 진화된 모습이라는 제안은 이러한 일반적 이해와는 차이가 있다.³⁾

2. 인 권

WSIS 원칙선언 및 행동계획에 ‘유엔 인권선언’ 제19조(의사표현의 자유)⁴⁾ 및 이와 관련한 시민·정치권리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9조를⁵⁾ 언

-
- 3) 한국은 다음과 같은 비공식 기고문을 제출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and “knowledge” (society) – A comment from Korea
The two terms are parallel and complementary concepts, not one preceding the other.

“Information society” in a narrow sense is a society in which the volume, speed and ubiquity of information flows have dramatically increased thank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Knowledge society (economy)” is a term usually used when one wants to feature the importance of knowledge in contrast to simple data or technologies. Proponents of the concept of a knowledge society also acknowledge that for the creation, accumulation and dissemination of knowledge do ICTs play an essential role.

Naturally, an “information society” in a broad sense includes the concept of a “knowledge society”.

In Korea, we frequently use the term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when we want to make clear what we mean is an Information Society in a broad sense.

Therefore, Korea regards that the expression of “transition from information to knowledge society” is contrary to the usage and understanding of the terms by the majority of the Korean community.

From this context, Korea understands that the “information society” as a WSIS terminology is the “information society” in a broad sense incorporating the concept of knowledge society within it.

- 4) 유엔인권선언 제19조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and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through any media and regardless of frontiers.

- 5) 시민·정치권리규약 제19조 제1, 2항

1.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2.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급하느냐의 문제이다. 미국 등 선진국, 시민사회의 경우 정보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이 특별하므로 이를 명시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기존의 공공질서 및 사회규범체계가 인터넷에 의해 붕괴되는 것을 경계하는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에 반대하며 만약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해서도 언급해야 하며⁶⁾ 그렇지 않으면 유엔헌장과 인권선언만 명시하자고 주장하였다. 많은 나라가 유엔헌장과 인권선언만 명시하는 안에 동조하고 있다.

한편 WSIS 논의에서 한국 및 브라질 등 신흥개도국은 '통신권'(right to communicate), '정보접근 및 이용권'(right to access information and utilize it)을 선언문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이라면, '통신권'과 '정보접근 및 이용권'은 정보사회에서 타인과 의사소통하고 경제·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 생활권적 기본권 이자 자유시장경제가 초래하는 정보격차를 국가의 필요적 개입 혹은 국제사회의 협력에 의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본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WSIS는 앞서 언급한대로 UN '새천년 선언'(Millenium Declaration)과 '새천년 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를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구현한다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WSIS는 UN '새천년 선언문' 제20항에서 "To ensure that the benefits of new technologies, especiall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f all kinds, regardless of frontiers, either orally, in writing or in print, in the form of art, or through any other media of his choice.

6) 유엔인권선언 제29조

- (1) Everyone has duties to the community in which alone the free and full development of his personality is possible.
- (2) In the exercise of his rights and freedoms, everyone shall be subject only to such limitations as are determined by law solely for the purpose of securing due recognition and respect f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nd of meeting the just requirements of morality, public order and the general welfare in a democratic society.
- (3) These rights and freedoms may in no case be exercised contrary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시민·정치권리규약 제19조 제3항

3. The exercise of the rights provided for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carries with it special duties and responsibilities. It may therefore be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but these shall only be such as are provided by law and are necessary:
 - (a) For respect of the rights or reputations of others;
 - (b)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or of public order (ordre public), or of public health or morals.

in conformity with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ECOSOC 2000 Ministerial Declaration, are available to all”이라고 천명한 것을 실천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표현의 자유’만을 선언문에 부각시켜 넣는 것에 개도국을 설득하여 동의를 얻는 것이 가능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 ‘표현의 자유’와 함께 ‘통신권’, ‘정보접근 및 이용권’ 등을 병기하는 방안이 가장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이들 신생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 및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 명백한 개념정의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타협안은 선언문에서는 유엔헌장과 인권선언만을 언급하고 행동계획에서 신생권리의 개념 및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명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3. 인터넷 주소자원의 관리

국가최상위도메인(.kr, .jp 등)하의 주소관리가 주권국가의 권한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나 일반최상위도메인(.com, .net 등)과 같은 국제인터넷주소자원 관리에 있어 i) 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와 기존 도메인업계의 입장, ii) 현행 체제에 반대하고 정부의 역할이 강조된 새로운 국제기구 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국가와⁷⁾ 개도국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현재의 ICANN 체제가 지나치게 미국 상무부의 영향 하에 있는 것을 시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넓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ICANN 체제 내에서 이러한 변화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견해; 새로운 국제기구 혹은 ITU와 같은 현존하는 국제기구로 권한을 이양하여야 한다는 견해; 새로운 국제기구 안을 찬성하는 경우에도 그 국제기구가 ‘정부간기구’여야 한다는 견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기구여야 한다는 견해와 같이 다양한 입장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건대 여러 이해당사자의 견해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공통이해를 간결하게 표명하는 선언문안으로 다음과 같은 문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Management of Internet names and addresses: While the policy authority for Internet names and addresses at the national level should be the sovereign right of countries, there should be appropriate coordination in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is accountable to all stakeholders. The management of Internet names and addresses

7) 유럽연합 내부에서도 영국 등 자유주의 국가는 정부의 주소자원관리에의 개입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should secure a fair 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a stable functioning of the Internet, respecting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transparency.

4. 지적재산권

2003년 6월 이전의 선언문안은 지적재산권(IPR) 보호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으며 행동계획(제34항)에서 지적재산권과 공공이익간의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① IPR과 정보사용자의 이해간 공평한 균형보장을 위한 이니셔티브 추진, ② 정보·지식 공공자원(public domain) 개발을 위한 적절한 법적체제(legal framework) 마련, ③ 토착 지식(indigenous knowledge)의 불공평한 사용에 대한 보호 강화를 규정하였다.

미국 등 지적재산수출국은 지적재산권보호는 정보사회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기존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약들이 이미 정보사용자와 소유자간의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불필요하며 기존의 지적재산권법제를 디지털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국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공정보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소유의 정보·지식을 일정한 경우 공유의 대상이 되는 정보·지식으로 취급하려는 것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기본원칙과 상충되므로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World Bank 보고서⁸⁾에 의하면 WTO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완전이행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국가는 미국이며 가장 손해를 보는 국가는 한국이다. 일반적으로는 선진국에 혜택이 돌아가고 개도국에는 손해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반세계화 운동에 한 이유가 되었으며 결국 WTO 도하 각료회의는 공중위생을 위하여 지적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도국 특히 한국은 현행 지적재산권법제가 디지털경제에도 그대로 연장 적용되어야 한다는 선진국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중간회의를 마친 2003. 7 현재 선언문안에는 기존의 지적재산권법제가 정보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미국안과 지적재산권법제가 정보접근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석되어야 한다는 브라질안이 병존한다. 우리는 IT분야 핵심기술을 상당 수입하고 있는 실정인바, 지적재산권과 공공이익간 균형을 강조하는 문안을 관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⁹⁾ WSIS

8) *Global Economic Perspectives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2002*, p.133.

9) 예컨대, "While IPRs play a vital role in fostering innovation in the Information Society, there is a need to promote initiatives to ensure fair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nd those of the users of information. An appropriate legal framework should

정상회의 선언문이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한계는 있으나 기존의 지적재산권관련 국제협약, 국내법규를 해석하거나 개정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5. 오픈 소스 S/W

정보화의 진전으로 운영체제(O/S) 뿐만 아니라 많은 응용 도구들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특정기업에 의한 독점적 공급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를 구매하여 이용해야 하는 개도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며 정보화 확산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유럽 제국 및 많은 개도국에서 정부조달의 경우 오픈 소스 S/W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채택하였으며, UNDP와 같은 국제기구는 국제사회가 오픈 소스 기반의 S/W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함께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¹⁰⁾

그러나 미국은 오픈 소스에 대하여 저개발국의 빈곤층이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열어주며, S/W 사용자에게 자신의 환경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차원에서는 공감을 표시하지만, 오픈 소스 S/W 만이 이들 목적에 부합하는 유일한 모델이 아니고 소스 S/W의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이 목적을 달성하는 다른 다양한 모델이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많은 개도국들이 오픈 소스 S/W의 보급 확산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도 외국 S/W의 이용에 많은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오픈 소스 S/W의 개발·확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6. 정보보안

정보보안(cybersecurity) 관련 선진국은 선진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동 기술을 상업화하여 수출하는 반면 개도국은 정보화 단계상 아직 보안기술 수요가 미미하다. 반면 우리는 정보범죄 급증으로 보안기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기술의 수준은 선진국에 못 미치고 있다.

한편 정보보안을 이유로 특정기술을 요구하거나 특정국가에의 보안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경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¹¹⁾ 또한 정보보안의 강화는 언론의 자유, 프라이버시보호

be defined to promote access to information.”

10) International Open Source Network의 구체적 활동은 www.iosn.net을 참고할 것.

11) 미국과 쿠바 간에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등과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다. 어느 한쪽을 위해 다른 가치를 희생하지 않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7. 지표, 지수 개발 및 기금 필요성

개도국들은 행동계획이 글로벌 정보사회란 목표달성을 위해 현실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표(benchmark), 지수(index, indicator) 개발, 각종 기금(fund)의 설립을 제시하였다. 생각건대 정보사회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및 지수의 역할은 인정하나 현실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구체적 평가대상, 목표연도 등에 대한 상세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지수의 경우 MDG지수, 인간개발지수 등 기존의 유사한 지수와 중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디지털연대기금(digital solidarity fund) 창설과 관련하여 과거 유사한 종류의 기금이 많이 설립되었으나¹²⁾ 목표달성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대부분의 선진국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이행 메카니즘, 특히 선진국의 재정적 기여 약속을 요구하는 개도국과 이에 대하여 버티기 전략을 펴고 있는 선진국간에 지리한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입장에서도 서둘러 재정기여를 약속하기 보다는 현재 정보통신부(KISDI, KADO), 외교통상부(KOICA) 등에서 집행하고 있는 IT분야 국제협력기금의 전체액수를 파악하고 그 효율성 및 홍보 제고에 우선적으로 애써야 할 것이다. 추가적인 재정기여 여부는 주요국의 입장과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

8. 정보화에 있어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역할

가. 정부의 시각

정부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초기투자자로서, 정보사회의 안정적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신뢰받는 제3자로서, 시장실패를 치유할 수 있는 규제자로서, 한 국가의 사회 각계 이익의 조정자로서 기능을 갖는다. 기업과 시민사회에 대해 WSIS 논의 과정을 공개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해서 그들을 최종 결정 및 협상의 당사자로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각국 정부가 최종 결정 및 협상의 당사자이다.

미국 등 일부 선진 국가들은 개도국이 정부주도의 독점적 통신시장을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12) 조정문, "대개도국 IT 인력양성사업 실태 및 정보사회정상회의에 대한 의견",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포럼(2003. 5. 23~24) 자료집*, pp.126~142.

참여가 보장되는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통신산업의 발달과 함께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개도국의 통신시장 자유화와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에 개도국은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의 통신시장 자유화 및 시장경쟁체제로의 전환은 농촌지역 등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 통신서비스 제공시기의 지연 등 통신서비스 공급상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통신시장의 대외 개방 시 자국 통신사업자들의 사업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국내적 및 범세계적 차원에서 정보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한다.

민간 부문의 성숙정도에 따라 미국과 같이 경쟁력 있는 민간 부문을 갖고 있는 국가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중심의 정보사회 구축을 주창함에 비하여, 개도국의 경우 민간의 기반이 빈약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대책 및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나. 기업의 시각

재계는 정보화를 위한 물리적 기반을 구축한 것도 기업이고 그 기반위에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도 기업이므로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정보사회를 구축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제도적 규제를 제거하는 소극적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WSIS에서 재계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조정, 개선하기 위해 만든 단체인 CCBI(Coordinating Committee of Business Interlocutors)는 WSIS의 성공적 개최 및 행동계획의 내실 있는 실천을 위해서는 재계의 역할이 중요할 것인 바 역할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계의 입장은 경쟁촉진, 전자상거래의 법적 장애 제거, 실효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전자서명 및 계약의 유효성 인정, 정책형성의 투명성 확보 등으로 요약된다.

다. 시민사회의 시각

시민사회단체는 몇 가지 측면에서 WSIS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선 현재까지의 논의 과정이나 공식 문건에서 정보사회에서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시민사회 운동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WSIS가 ITU 주관으로 준비되는 만큼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정부대표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시민사회의 참여는 제한되지만, 의사결정과정의 공개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집단이 정부대표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공간적 장을 제공한다는 점이 종래의 국제회의에 비하여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WSIS의 분위기는 국내에서의 WSIS 준비과정에도 투영되어 지난 2003. 5. 23에

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포럼”을 개최하여 공동 성명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¹³⁾

시민사회는 인권과 아울러 정보경제에의 민주적 개입, 문화 및 언어적 다양성, 소수자 보호, 세계적 차원에서 공공지식의 확충, 감시체제 강화에 대한 반대와 개인정보보호 등을 주창하고 있다.

Ⅲ. 향후 전략

1. 기본입장

WSIS 선언문 및 행동계획에 대하여 미국 등 선진국은 경쟁촉진, 지적재산권 보호 등 정책 및 규제환경 정비를 강조하고 있으며, 개도국은 선진 각국이 국제 정보격차 해소, 개도국의 IT인프라 구축 및 정보접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대규모의 직접적인 지원계획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WSIS 선언문과 행동계획 초안과 관련하여 제출한 공식 기고문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¹⁴⁾

- 정보격차 해소에 선진국과 개도국간 공동 노력
- 정보접근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
- 정보화인력 개발 및 육성의 중요성 강조
- 정보사회 건설에 지역별, 문화적 다양성 고려
-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의 중요성 강조.

아국은 IT 선진국으로서 광대역정보통신서비스,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가져올 경제·사회적 편익을 강조하여 이의 활용을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으나 이미 한국 정보통신 환경의 우수성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지나치게 강조함은 경쟁국가의 시기심을 높이고 한국의 대개도국 기여에 대한 기대감만 부풀일 우려가 있다. 나아가 WSIS는 기술에 포커스가 있는 회의가 아니라 기술을 통한 사회와 경제의 개발에 포커스가 있는 회의라는 점도 유념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이 정책 및 규제환경 정비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정비의 방

13) www.kforum.unesco.or.kr

14) Document WSIS/PC-2/CONTR/24-E; Document WSIS/PC-3/CONTR/108-E 참조

향에 있어서는 개도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다.

2. 아국 정상 참석여부

현재까지 유럽 및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30여개 정상이 참석의사를 밝혀오고 있으나 미국, 중국, 일본 정상은 참석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ASEAN+3와 시간대가 인접한 관계로 아시아 정상들의 참석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점차 WSIS 본회의에 근접하면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여론의 관심을 끈다면 그 동안 소극적이었던 주요국 정상들도 참여 쪽으로 선회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10월은 되어야 참석의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아국 정상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참석의 유인이 있는 회의이다. 우선 한국의 정보화에 대한 투자와 성과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관계로 한국 정상의 WSIS 참석 및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다. 노대통령으로서도 인터넷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노대통령이 취임이후 방미, 방일, 방중외교를 수행하였으므로 이제 유럽지역에 대한 방문외교의 필요성이 높으며 WSIS 참가와 유럽 몇몇 국가에의 방문외교를 엮는다면 시의성과 모양새도 돋보이게 될 것이다.

그리스는 WSIS 병행행사로 'ICT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회의'를 제안하면서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과 더불어 노대통령의 참가를 희망하고 있다. 노사모를 비롯하여 노대통령이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인터넷민주주의의 경험을 소개한다면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3. 아국 기업과 시민단체의 참여

업체차원에서도 WSIS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차원에서의 'WSIS 의제준비위원회'에 통신사업자연합회 담당자가 참여하고 별도로 정보통신기업분과를 구성하는 것으로 기획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활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WSIS는 '정보통신기술의 개발에의 기여'에 포커스가 있으므로 우리 기업이 개도국에서 성공적으로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 개도국에서 관심이 많은 리눅스 기반의 공개소프트웨어, 해외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활동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위 정보통신기업분과를 활성화하거나 확대 개편하여 조속히 참여방향(이벤트의 주제, 구성, 참여업체, 전시기술, 라운드테이블 참여여부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지난 5월 이미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한 이래 'WSIS를 위한 시민사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정보사회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¹⁵⁾

한국 시민사회의 활발한 활동을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공공기관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포럼을 후원하였다. 나아가 정부의 기고문이나 대표단의 발언에 나타나는 공식적인 입장에는 시민사회의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파리중간회의에서 한국 시민단체 대표단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같은 국내문제를 가지고 외국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의 양상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의 갈등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WSIS 의제,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인권, 지적재산권, 오픈 소스 S/W, 인터넷 거버넌스 등에 있어서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는 상당부분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최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IV. 결 론

7월 중간회의의 결과 WSIS 원칙선언문의 골격이 잡혔으며, 행동계획의 경우 8월 중에 Prep-Com 의장, 파리중간회의 의장, WSIS 집행위원회(Bureau) 지역대표 등이 모여서 체계를 잡을 계획이다. 결국 9월 PrepCom-3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원칙선언 문안에 대한 협상을 통한 타협,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본회의 및 병행 행사의 구체적 운영방안도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원칙선언문 및 행동계획의 문안과 본회의의 수석대표의 연설문에 포함될 제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WSIS를 준비해 왔다. 향후에도 이러한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나 이제는 관심과 준비의 범위를 넓혀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및 병행행사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WSIS는 정부뿐만 아니라 업계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회의이니 만큼 한국 내에서의 준비도 이들 3자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WSIS 원칙선언 및 행동계획이 공동의 관심사라면 고위급 라운드 테이블은 특히 정부가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이고, 병행행사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관심을 갖아야 할 것이다. WSIS에 참가하는 대통령 혹은 다른 수석대표가 우리 기업 혹은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병행행사를 방문하는 일정을 잡는다면 기업과 시민단체에도 큰 격려가 될 것이다.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공약은 실천이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WSIS가 2단계로

15) 상세한 내용은 동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홈페이지인 www.wsis.or.kr을 참고할 것.

진행되며 2003년 12월 제네바에서의 약속은 2005년 11월 튀니즈에서 그 이행이 평가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불리 부담이 되는 사업을 제안하기 보다는 실천에 무리가 없으면서도 간접적으로 한국의 정보화 수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한국 정보통신업체의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계획 도출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